



미국의 민주주의 트럼프 현상은 일탈이 아니다

글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미국학과 교수 / nsfsr@khcu.ac.kr



* 미국의 상징인 성조기와 자유의 여신상

“미국 역사의 종말?”

90년대 필자의 미국 유학 시절, 정치발전론(Political Development) 수업을 수강하고 나서면서 한 선배 유학생이 냉소적으로 던진 질문이었다. 그리고 보니 대개 발전론 수업은 남미나 동아시아, 혹은 아프리카의 저발전 국가를 주요 사례로 다루곤 했다. 하지만 60년대에 이르러서야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시작한 나

라이자 아직도 일부 주에서는 이들의 투표 행위를 방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곤 하는 곳이 미국이다. 그 점에만 국한해서 보면 미국은 정치 발전 과정에 있는 나라이고 한국은 정치 발전이 완성된 나라이다. 하지만 당시 많은 이들은 암묵적으로 미국을 정치발전의 도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완성된 모델로서 다른 나라들이 도달해야 할 목표로 간주하곤 했다.

어쩌면 이제 미국 대학에서도 남미가 아니라 미국의 정치발전론을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상황이 도래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번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반(反)이민, 반(反)여성 등에 구사하는 일베 스타일의 극단적인 레토릭은 민주 공화제가 타락하면서 나타나는 참주선동 정치의 전형이다. 이 사태는 마닝이 『선거는 민주적인가』(1997)에서 말한 대의제와 빈번한 선거가 결합한 창조적 발명품으로서 미국식 민주주의가 바람직한지, 혹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큰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도대체 미국식 민주주의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표현을 빌자면 미국 민주주의 종말의 시작인 것일까?

이 글이 오늘날 미국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의 병리현상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아니다. 다만 이번 미국 대선을 매개로 미국식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생각해 보는 단상 정도의 글이라 할 수 있다.^①

트럼프 현상: 건국 시조들의 의도와 후대의 전략적 선택이 만든 정치질서

필자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엘리트가 주도하는 ‘점진주의적이나 영구적인 혁신 모델’로 규정한다. 이는 양당제 틀 내에서지만 큰 선거구에서 빈번한 선거를 통해 ‘탁월한’(excellent) 엘리트(마닝의 표현을 빌자면 자연귀족)를 선출하고 이들은 점진적이고 항상적으로 반응성을 작동시킨다. 다만 질서 자체의 급진적 전환의 길은 다양한 루트로 철저히 봉쇄되어 있다. 비유하자면 미국 민주주의 모델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컴퓨터 운영체제처럼, 소스 코드를 독점하되 부단히 이를 전문가들이 갱신해나가는 제한적 혁신이다. 이는 리눅스처럼 소스가 완전히 개방되어 다수 집단지성이 주도하는 열린 체제는 아니다. 미국 건국의 역사는 마이크로소프트 모델을 지향한 매디슨이 상대적으로 리눅스를 지향한 제퍼슨에 승리해간 과정이다(안병진, 『마이크로소프트식 2001』).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리눅스에 비해 아래로부터의 역동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미국식 대통령제는 영국처럼 의회 해산이라는 역동적 정국을 만들어 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스위스 식 국민 투표도 연방 차원에 존재하지 않는다. 근본적 이슈에 대한 헌법개정 제안은 상하 양원 2/3가 찬성하거나 주 2/3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마저도 통과하려면 모든 주 3/4의 승인이나 헌법개정의회에서 양원의 3/4이 동의해야 하기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미국은 4년마다 대선에서 아웃사이드 영웅을 찾아내 제도권 내로 투입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다. 『컬처 코드』의 라파이유가 지적한 것처럼 미국 정치에서 유권자들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키워드는 반란

① 이 에세이는 본인의 출처 『미국 의 주인이 바뀐다: 건국 이후의 첫 주류 교체와 미국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메디치 미디어, 2016)의 문제의식과 주요 내용에 기반한 것임을 밝힌다. 보다 자세한 이론적, 역사적 내용은 위 책을 참조할 것.

미국식 민주주의는 탁월한 엘리트 선출에는 유리하지만 질서의 급진적 전환을 봉쇄한다



* 미국 러시모어 산에 있는 대통령 조각상. (왼쪽부터)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시어도어 루스벨트, 에이브러햄 링컨



* <미국의 헌법 서명>, 하워드 찬들러 크리스티의 그림

자, 혹은 도전자이다. 하지만 이 아웃사이더 투입에 의한 혁신은 결코 체제의 역동적 변화의 길로 나아가는 보증수표는 아니다. <스미스 씨 워싱턴에 가다>나 <웨스트 윙> 등 미국 리버럴 정치영화의 유명한 신화인 “리얼 씽”에의 기다림(real thing: 진짜배기 정치인)과 그 이후 환멸, 좌절의 사이클은 바로 이러한 점진주의 혁신과 더 급진적 길의 봉쇄 프레임에서 유래한다.

이 제한 속에서도 미국식 대의제와 선거는 한국의 정치에 비해 생각보다 반응성이 민감하다. 우선 선거의 측면을 보자. 미국

은 언제 방문하더라도 어딘가에서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영구적 캠페인’(permanent campaign)의 나라이다. 심지어 현대에는 선거 캠페인을 종료하고 국정이 시작되는 시점에도 선거 캠페인처럼 거버넌스가 이루어진다. 이 빈번한 선거는 많은 비용이 들고 금권선거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도권의 반응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2년마다 중간 선거가 정신없이 다가오는 현실에서 순간적 반응성의 결여는 곧 낙선을 의미한다. 다만 이 반응성은 단순 다수제 선거의 특징상 제3당이 정치 무대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양당에 부단히 수렴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미국 지식인들은 이를 별침을 한 번 쏘고 나서 죽어버리는 벌에 비유하곤 한다.

미국식 선거만큼이나 대의제의 내부 양상도 독특하다. 이 미국식 대의제 내부에서는 한국에서의 오해와 달리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아니라 입법부가 주도권을 가진다. 기형적인 한국식 수입품(제왕적 대통령제)과 달리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가 아젠다를 이끌기에 하원의장, 상원 외교위원장 등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다만 이 대의제 내 엘리트 경쟁 체제는 대단히 정교하다. 입법부의 법률 제정 권한과 대통령의 비토권, 다시 의회의 재의권들이 촘촘히 설계되어 상호 타협의 유인을 만들어 놓았다. 이 입법, 행정, 사법의 3부는 상호 의존과 견제의 시스템으로 인해 공화주의의 적인 ‘자의적 통치’(곧 부패)를 방지하는 작동원리를 내장

한다. 특히 이 대의제와 공화주의에는 더 큰 전제가 숨겨져 있다. 주로 자산가 계급인 건국의 시조들은 무지한 민중의 변덕으로부터 탁월한 엘리트의 속고 기능을 보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은 한나 아렌트가 찬양한 바 있는 미국 건국의 경제적 틀 자체가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애초에 출발부터가 유럽과 달리 소위 ‘벤처 기업의 국가’이다. 해양 항해의 모험에서 파산의 위험을 분산시키고자 했던 합작 투자자들이 신대륙을 소위 ‘발견’했고 이 벤처 정신을 가진 이들은 ‘법인 자본주의’를 발명하여 본격 발전시켰다. 이는 영국의 가족 경영과 달리 자본의 대규모화와 전문화를 가능하게 한, 당시로는 혁신적 조직 기법이었다. 정치적으로는 이 기업 국가 헤게모니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법인의 인격성을 인정하며 선거자금 기부에서 기업의 권능을 크게 강화하였다. 비인격적 자본인 법인이 마치 사람처럼 표현의 자유 대상으로 전화한 것은 기업의 원리가 전 사회적으로 확고하게 구축됨을 상징한다.

미국 리버럴들의 전략적 선택

흥미로운 것은 이 기업국가 경향에 대한 미국 리버럴들의 전략적 선택이다. 80년, 84년, 88년 등 연이은 선거 패배로 주류에서 벗어나 영구적 소수 정당(Minority Party) 낙인이 찍힌 민주당에 심각한 위기를 느낀 일부 리버럴들이 지구적으로 지배적 담론인 신자유주의 세계화 및 가족의 가치, 질서와 안정 등을 적극 수용하며 변신을 시도한다. 클린턴, 고어 등이 바로 이들 네오 리버럴 정치세력이 내세운 스타 상품이다. 하지만 손 윌렌츠가 『레이건의 시대』(The Age of Reagan, 2008)에서 지적한 것처럼 클린턴 리버럴 시대는 어디까지나 레이건 보수주의의 자장하의 리버럴 정부에 불과했다. 결국 클린턴 임기는 리버럴들이 원래 선호한 사회투자 국가라기보다는 균형예산을 중시하는 노선과 함께 금융자본주의화가 상당 수준으로 강화되었다. 이것이 주택 시장 규제완화 등으로 이후 조지 부시 시기 본격화된 자산 거품(서브프라임 모

연이은
선거 패배로
위기에 빠진
민주당의 네오 리버럴
정치세력은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를 수용하며
변신을 시도한다



* 폴 라이언 하원의장의 취임식 ©연합뉴스



* 미국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치러진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TV토론 ©연합뉴스

기지 사태)의 씨앗을 야기했다.

미국 리버럴의 적극적 주류화, 중도화로의 전략적 선택이 오늘날 미국 민주주의를 자본에 더욱 포획되는 방향으로 이끌었다면, 공화당의 전략적 선택은 정치 지형을 더욱 우경화의 길로 극단적으로 밀어붙였다. 토머스 샬러(The Stronghold, 2015)에 따르면 1995년 킹그리치 하원의장이 주도한 “미국과의 계약” 운동은 그간 타협주의적인 공화당 인사이더들과 달리 강경 보수주의 아젠다 전투적 대결주의를 내걸고 집토끼 유권자들을 적극 결집하고자 한 전환적 시도였다. 이 전략은 특히 주선거나 지역 선

거에서 큰 위력을 발휘한다. 왜냐하면 선거구 조정 결과에 따라 점차 히스패닉 등 소수계 이민자들의 세력 강화에 위기감을 느낀 백인층의 연합만으로도 본선과 달리 쉽게 승리할 수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이다. 공화당 지도부의 강경 보수화 기조는 점차 공화당 당내 예비경선 등에 참여하는 지지자들에게도 이어지고, 이는 갈수록 대선에서 중도표 흡수에 유리한 통합형 정치가(특히 주지사 출신)들이 예비경선 관문을 통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이번 대선에서 켈리 앤 풀로리다 전 주지사나 존 케이식 오하이오 전 주지사는 트럼프에게 여지없이 패배하고 말았다.

트럼프 현상은 이러한 리버럴들의 전략적 중도화, 공화당의 더 강경한 우경화 및 이의 토양이 되는 백인 보수주의 정서를 화약고로 한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오바마의 연이은 집권이다. 남부 백인 주지사 출신이자 중도주의자인 빌 클린턴 대통령조차 “문명의 적”으로 강경 보수주의에 의해 낙인이 찍힌 상황에서 오바마의 등장은 이들에게 큰 문화적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더구나 오바마 집권 후 금융위기에 책임이 있는 이들이 처벌받지 않았으며(소위 대마불사의 신화) 중하층의 자산이 여섯 배나 하락하자 이는 곧 모든 워싱턴 인사이더에 대한 극도의 반감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오바마의 출생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일약 최고 스타로 등극한 트럼프는 이미 인화성 물질이 사방에 가득한 상황에서 성냥불을 갖다 댄 것에 불과하다.

미국 대선,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민주주의

이번 대선에서 누가 집권하든 이후 한반도는 큰 격랑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다. 힐러리 후보는 동맹과의 결속력의 굳건한 유지 및 북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기본 노선으로 한다. 트럼프는 동맹국의 자체 비용 분담 요구라는 고립주의 노선을 기본으로 한다. 이후 당선된 대통령의 외교안보 라인이 확정되어야 노선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겠지만, 누가 당선되든 간에 현 오바마 노선과는 사뭇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은 오바마 시기의 국제 관계에서 미국이 보인 무기력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바마 정부의 소위 ‘전략적 인내’ 노선과 박근혜 정부의 대북 압박 노선이 결과적으로 북한 위협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기에 새로 집권할 정부는 몇 개월간 중요한 정책 리뷰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이 시기에 한국 정부와 지식인 사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 체스판 위의 무기력한 장기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과거 94년 제네바 협상 등의 수많은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한반도의 외교안보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재즈 연주가 펼쳐지는 무대이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이 가지고 있는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압적 외교의 환상을 벗어나 보다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하도록 미국과 한국의 지식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미국이 중국과 북한에 대해 단호함과 동시에 상호 이익을 이해하고 발견하려는 노력이 보이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지혜로운 정책 방향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한반도의 안전한 미래를 위한 사활적 과제이다. **민주리**

누가 집권하든
한반도엔 큰 격랑
가능성 높아...
한국 정부와 지식인
사회 역할
매우 중요



* 힐러리(위)와 트럼프(아래)의 지역 유세 모습 ©연합뉴스